

사라진 아이들… 불꺼진 도시… 기업역할 더 중요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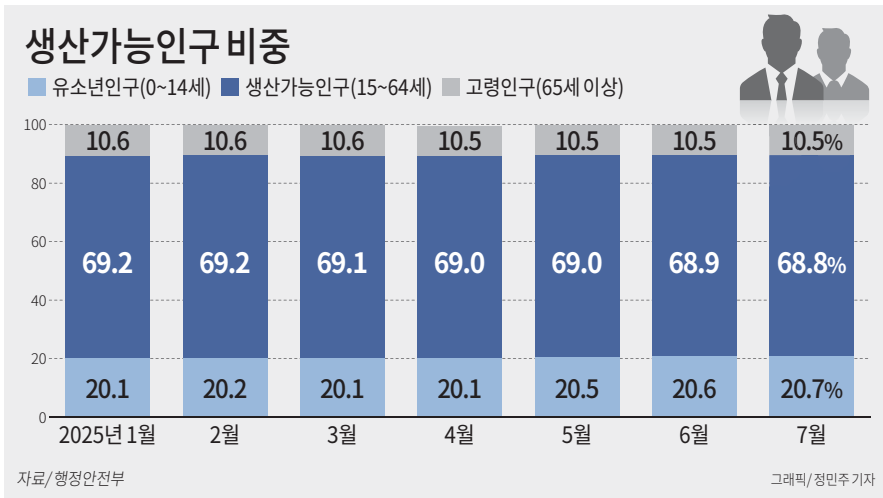
생산가능인구 비중 36년새 최저
주요도시 공실 증가… 성장 ‘적신호’
“새로운 활력을 쏟아부어야 할 때”

노동시장 참여가 가능한 국내 인구 비중이 198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0년대 초중반 정점(총인구의 73.4%)을 찍고 내리막을 내닫고 있다. 이는 국제기구 등이 향후의 한국 경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부분 중 하나다.

다른 주요국 다수도 생산가능인구 비중 하락을 겪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우리나라만큼은 아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5~64세 인구는 지난 7월 말 기준 68.8%로 집계됐다. 불과 1년 전의 69.6%에 비해서도 0.8%포인트(p) 낮다.

OECD와 행안부가 보유한 통계를 종합하면, 국내 일할 수 있는 인구의 비중은 1989년(68.6%) 이래로 36년 사이 최소 수준이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급증을 20·30대 청년층이 상쇄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됐다. 상황은 갈수록 심각하다. 14세 이하 유소년 수의 급감 탓이다.

OECD가 2022년도 집계로 비교한 주요 52개국(회원국+비회원국) 비교에서 한국보다 유소년 비중이 낮은 곳은 없었다. 한국의 14세 이하 인구가



11.5%인 반면, 남아공은 28.1%, 이스라엘은 27.8%, 인도는 25.3%, 멕시코는 25.1%에 달했다.

사우디아라비아(24.5%)와 아르헨티나(24.0%), 브라질(20.5%)도 20%를 웃돌았다. 15% 선을 넘은 국가는 미국(17.8%)과 러시아(17.7%), 프랑스(17.4%), 중국(17.2%), 영국(17.1%), 노르웨이(16.8%), 캐나다(15.6%), 네덜란드(15.4%) 등이었다. 주요 20개국(G20) 평균이 20.3%, 유럽연합(EU)이 15.0%로 나타났다.

최근 출생아 수가 반등했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 유엔(UN)은 한국을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하고,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2.1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0.1%에 그친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이달 초 ‘2025 인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새 정부가 국정 기조를 세우는 이 시점에서 인구 문제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2025년 대한민국은 중대한 인구 전환점에 서 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100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기에 아직 기회가 있다”고 했다.

일할 사람이 없는데 국가 성장으로 연결될 리 만무하다. 지방 경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 메트로신문이 가 본 경남의 한 군 지역은 15년쯤 전에 비해 크게 달라져 있었다. 2008년 유동인구가 꽤 많았던 읍내는 주말임에도 매우 한산했고, 타 지역 주민들까지 찾아오던 유명 공원에서 왁자지껄 뛰놀던 아이들 모습

은 찾을 수 없었다. 동네 할머니들만이 모여 노래대회를 하고 있었다. 가장 젊게 보이는 분들도 최소 70대 초반은 돼 보였다. 이 지역 인구는 15년 만에 5000명(12.5%) 넘게 줄었다.

대전과 대구 등의 광역시에서도 이른 저녁부터 불 꺼진 상점을 흔히 볼 수 있다. 가장 젊은 도시라는 세종에도 상가 공실이 늘어만 간다. 민간소비 등의 내수가 살아나기 힘든 구조적 문제를 ‘인구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기업환경을 둘러싼 국제 질서는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는 사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미·대중 교역을 병행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에 난처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다.

미국발 상호관세가 전 세계 상품에 매겨졌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가입여가격경쟁력 효과를 톡톡히 보던 기업들이 일본 및 유럽 기업들과 같은 위치에서 경쟁해야 하는 위치에 놓였다. 세 곳 모두 미국 수출 시 관세 15%를 부담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미국과 주요국 간 무역협상 타결로 통상불확실성은 완화했으나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하방 압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글

로벌 가치사슬을 감안하면 향후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는 대미국 수출뿐 아니라 여타 국가로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내부 갈등도 성장에는 저해 요소다. 새 정부가 사회분문 격차 해소에 나설지 주목된다. 지난해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74만8000원으로, 2023년(166만6000원)보다 커졌다. 그간 사실상 매해 격차 확대가 거듭됐다. 올해 액수 차이는 200만 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8월 펴낸 보고서에서 “한국이 정규직에 대해 지나친 수준의 고용 보호를 하고 있다”며 “이를 누그러뜨릴 시 경제활동 생산성 및 일자리가 5%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OECD 집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29.3%에 달한다. 남자 중위임금(고임금 순으로 일별로 세웠을 때 정중앙 값)이 4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여자는 중위임금 기준으로 이보다 29.3% 적은 282만8000원을 받았다.

이제 더 이상 손놓고 바라볼 수 없다. 새로운 활력을 쏟아부어야 할 때다. 새 정부의 방향 설정이 기점이 되어야 하고,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기업들의 역할이 어느때 보다 중요해졌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1면 ‘美, 삼성·SK 中 공장’서 계속

NXT, 일평균 7.2조 거래… 주식시장 안착

6개월만에 800개 종목 거래
일각선 ‘15%룰’ 개정 지적도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출범 반 년만에 한국거래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다. 당초 3년 내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삼고 출범한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성장의 발목을 잡은 ‘15%룰(NXT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이 전체 시장의 15% 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8월 일평균 거래량은 1억 8125만주다. 같은 기간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량(13억3052만주)의 13.6% 수준이었다.

특히 8월 성장세는 가팔랐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7조2392억원으로 한국거래소(15조4263억원)의 절반(46.9%)에 육박했고, 주식시장 전체 거래대금에서는 31.9%를 차지했다.

출범 첫 달 주식시장 거래대금 점유율이 3.8%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울 정도의 성장이다. 3월 초 출범 당시 상장종목은 10종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800개 가까운 종목이 매매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는 프리마켓(오전 8시~8시 3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8시)을 개설, 기존까지 6시간 30분이었던 주식 거래시간을 12시간으로 대폭 늘린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이 넥스트레이드 전체 거래량과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8%와 30.6%에 이른다.

시장 한 관계자는 “넥스트레이드는 개장 직후 발생했던 일부 증권사의 전산오류 등 초기 진통을 이겨내고 안착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최근 공개된 2분기 영업보고서를 보면 상반기 전제로는 14억원 순손실이 났지만, 순손실이 71억원에 이른 1분기와 달리 2분기에는 5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한 것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하지만, ‘15%룰’ 규정 준수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일부 종목들의 거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5%룰이란 대체거래소의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말한다.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하고자 대체거래소도 입됐지만, 한국거래소의 성장이 전체 돼야만 대체거래소도 거래량을 늘릴 수 있는 셈이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 단계에서 넥스트레이드의 빠른 성장세는 복수거래시장 체제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고무적인 성과이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점유율 도달이 오히려 시장 존립과 발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점유율이 상승할수록 KRX의 비중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므로, 시장 경쟁구조의 동태적 변화와 거래 환경의 다원화를 반영한 기준 개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대체거래소에 대한 질적 평가, 유동성 분산 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신하은 기자 godhe@

가계대출 지속 증가… 정부, 추가 규제 나서나

6·27 대책에도 서울 중심 집값 상승

5대은행의 가계대출이 지난 8월에도 여전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와 은행의 대출 심사 강화에도 여전히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어 조만간 정부의 또다른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

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8일 기준 762조 1971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3조2237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2월 3조900억원 ▲3월 1조8000억원 ▲4월 4조5300억원 ▲5월 5조원 ▲6월 6조7500억원 ▲7월 4조 1400억원을 기록했다. 6월을 기점으로 서서히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집값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되며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2450만원으로 1.57% 상승했다. 특히 강남 동남권은 6월 21억4362만원에서 7월 21억8483만원으로 1.92% 올랐다. 주변인 성동·마포·동작 등을 포함한 지역의 집값부터 수도권의 집값도 올랐다. 수도권의 7월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억2220만원에서 7억2955만원으로 1.02%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조만간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개월 기간을

둔다. 서초, 강남, 송파, 용산에 대한 규제는 9월 30일 종료한다. 이전에 강력한 대책으로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는 방안도 예상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은행들은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대출 한도를 낮춘다. 처음에는 대출 한도가 낮아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세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차현정 기자 hyeon@